

5·18 8차 보상 1년간 22% 완료...올해 안에 마무리될까

1979명 피해보상 신청...연행·구금 70건 등 222명 인정 그쳐 1~7차 탈락 재신청 재차 불인정 많아...진술 불일치·증거 부족 광주시, 조사인원 확충...심의 '2주에 3회' 수준으로 늘리기로

5·18민주화운동 제8차 피해보상 심의가 해를 넘긴 가운데 심의를 완료한 신청자 비율이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피해 보상 사실 조사와 심의 속도를 높여 올해까지 나머지 78% 피해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5·18 8차 피해보상 접수를 받아 이듬해 1월부터 사실조사와 보상 심의를 시작했다.

총 피해보상 신청자는 1979명이며, 성폭력 피해자 25명, 해직자 175명, 학사징계자 182명, 재분류 329명, 사망자 1명, 행방불명자 14명, 상이자 290명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5차 보상심의 기준 437명(22.0%)을 심의 완료했으며, 이 중 222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215명은 불인정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22명 중에는 연행·구금 70명, 학사징계 96명, 해직 13명, 질병 후유증사망 1

명, 기존 상이 등급 재분류 42명 등이 포함됐다.
인정자들에게는 현재까지 31억 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불인정 사례의 경우, 상해 사례는 과거 1~7차 피해보상 과정에서 탈락했다가 재신청했다가 재차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우보증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등도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불인정자 중 재심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모든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한 보상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인정에 따른 재심의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을 확충해 보상 심의 속도를 높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간제 조사 인력 1명을 추가 배정받고, 광주시 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해 기존 2인 1조 4팀에서 5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기존 주 1회 수준이었던 보상 심의 건수를 2주에 3회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청자들 중에는 "보상 대상을 확장시켜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5·18 8차보상 대구·경북지역 신청자들은 최근 5·18 8차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내용적 관련성을 확장 적용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5·18보상법에서는 보상 대상의 시간적 관련성을 '5·18을 전후하여'라고 표기해 구체적으로 일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1980년 5·18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5·18 관련 시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구·경북 신청자들은 "5·18정신을 축소하고 5·18의 전국화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8차보상 신청자들을 심의함에 있어 기계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신청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 내용적 관련성을 확장해 심의,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존(1~7차) 기준을 원칙으로 삼아 5·18 직접 관련성을 따지다 보니 5·18 이후에 활동한 이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5·18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재심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방학은 책임기 좋은 날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22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져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왜곡' 지만원 책 출판·배포 금지

법원, 5·18기념재단 가처분 인용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22일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판사 송중호, 박혜진, 황혜련)는 지난 21일 재단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단부는 "(지씨의 책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5·18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책에서 ▲5월 18일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찾아가 돌격해 공격을 가했다 ▲광주에서 촬영된 시체장사 사진들이 매우 많으며 여

기에 동원된 남녀노소들은 100% 북고인물이다 ▲북고군은 대형 버스와 트럭을 몰아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해 했다는 등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재단부는 지씨의 책에서 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재단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문석 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의 실형 중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며 5·18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퍼지고 있는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선 5·18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2월 지씨의 책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

"전남 장애인시설 성추행 가해자 감금은 위법"

인권위, 성폭력 대응 매뉴얼 권고

전남의 한 장애인시설이 원생간 성추행 의혹과 관련, 가해자를 감금한 것은 장애인 복지법 위반과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전남지역 정신요양시설의 원생에게 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애시설에서 근무한 직정인은 "시설에서 입소자 성추행 등의 문제가 수차례 발생했고, 입소

자가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당에 분리하면서 자물쇠를 채워 감금했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측은 "특정 입소자가 당직 직원만 있는 시간대에 공격적 행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의사에게 보고해 생활실과 멀리 떨어진 격리실에 격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강당에 30분 이하로 분리했던 것"이라며 "의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련 기록도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진술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 입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인 대응 조치는 하지 않았다"면서 "입소자를 강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홀로 머물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물쇠로 잠그는 등 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 '격리 및 강박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입소자의 작업치료를 시행하면서 '작업치료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고, 시설 직원이 입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입소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대·동신대·광주교대 등록금 인상

광주여대 내달 3일 인상여부 결정

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올릴기로 했다.
2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광주대는 전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5.04% 인상을 결정했다. 광주대는 재학생 복지와 장학금 확충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신대도 등록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동신대는 2009년 이후 16년간 등록금을 인하시거나 동결했지만, 올해는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신대 관계자는 "인상분을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교수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다"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해 재학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인 광주교대도 4.98% 인상을 결정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 지역 다른 사립대학들도 중이다. 광주여대는 24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할 방침이며, 송원대는 다음달 3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역 사립대학인 조선대·호남대·남부대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조선대는 지난해 15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국립대인 전남대·목포대·순천대 등도 정부 요청에 따라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